

## 일본의 신민족주의(新民族主義)운동: ‘자유주의사관’(自由主義史觀) 운동을 중심으로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

최근 일본사회에는 ‘건전한’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일본의 근대사를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식인 중심의 운동이 사회운동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해나가고 있다. 소위 ‘자유주의사관’(自由主義史觀)운동이 그것이다. 이 운동은 전후 다소 침체되었던 일본의 민족주의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일본사회에 신민족주의의 만개를 예고하고 있다. 이 글은 이 자유주의사관운동이 일어난 과정과 운동의 성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운동이 일어난 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이 글은 근대화 초기에 이루어져 전쟁을 이끈 전전의 민족주의와 전후의 상황을 먼저 고찰하였다. 전전의 민족주의가 민간에서 시작되었으나 곧 국가주도로 바뀌었던 데 비해, 최근의 신민족주의는 끊임없는 국가의 우경화를 배경으로 하고, 정당 내의 움직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지식인 주도의 사회운동세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 전전의 민족주의운동이 비판세력을 차례로 흡수하여 전시에는 거의 사회 전 부분을 통합시켰으며, 전후에도 소위 양심세력이 존재했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세력을 이루거나 또는 민족주의나 우경화된 정부에 도전하는 운동세력은 1960년대 신좌파 이후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전쟁책임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자유주의사관운동에 반대하는 운동세력이 규모는 작지만 이전과는 다른 진지함과 응집성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적 경제침체 상황에서 앞으로 자유주의사관운동을 비롯한 신민족주의운동이 일본에서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과, 타 사회운동에서와 같이 국가와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이 운동이 전전처럼 전 사회영역으로 침투될 것인지, 그리고 국가주도로 바뀔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 I. 머리말

1990년대에 들어 일본은 아시아 여러나라들로부터 전쟁책임을 바짝 추궁당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다. 경제적 뿐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도 세계의 지도국이 되려는 일본을 세계사회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설 자리를 잃게하는 어마어마한 공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맥코맥, 1997). 마침 1993년 자민당 집권체제를 벗어나 새롭게 등장한 연립정권은 이에 과거와는 다르게 발전적으로 대응하려는 몸짓을 취했으며, 이와함께 전후 다소 잠잠해졌던 민족주의 운동이 사회전반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면서 새롭게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소위 ‘건전한’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일본의 근대사를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움직임은 최근 일본의 새로운 민족주의운동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광범위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개되고 있다. 학자와 교사 중심으

로 이루어진 ‘자유주의사관’ 연구회로부터 시작된 이 움직임은 처음부터 연구회일 뿐 아니라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으며, 이 모임의 중심인물들이 보다 폭넓은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만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 이하 ‘만드는 모임’(つくる會)으로 약칭함)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지지하여 일본회의(日本會議), 소화사연구소(昭和史研究所) 등 기존의 또는 새롭게 형성된 보수적 시민단체들이 적극적 활동을 벌이고, ‘밝은 국회의원연맹’(明るい國會議員聯盟) 등 정치인들의 모임도 이러한 활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 이 운동은 지식인들 사이에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전후인식에 대한 토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하며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한편, 연립정권이 발족시에 취한 전쟁반성의 태도에 반대하여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또 어느 정도의 연계를 가지면서, 이들 움직임을 지원하는 우익단체들과 함께 현대 일본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운동의 배경에는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일본 경제의 불황과, 냉전체제 붕괴 후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대국주의(大國主義)가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 방침의 우선화에도 영향을 미쳐왔다고 보여지며 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일본내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여 이 운동에 하나의 요인이 된 전쟁책임운동에도 중요한 과장을 미쳐 운동의 파편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자유주의사관’운동은 운동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대로 민족주의운동이다. 전전의 침략주의적 민족주의나 현대의 극우파를 의식한 듯, ‘건전한’ 민족주의임을 강조하지만, 이 운동은 메이지 초기부터 일본 근대화의 사상적 지주였으며 전후에도 형태를 달리하여 곳곳에 잠복해 있는 민족주의 운동들과 확실하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일본민족주의의 흐름 속에 하나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전쟁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져 나온 자유주의사관운동이 일본의 민족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점하는 위치를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이 운동이 형성·전개된 과정과 그 성격을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현대 일본사회의 정신적 상황을 추론하고, 일본의 민족주의운동의 성격과 사회운동 전반의 일본적 특수성에 관해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그간의 신문 보도자료와 잡지의 평론을 중심으로 이 운동에 대한 일본사회의 반응과 자기평가를 중요하게 참고했고, 자유주의사관 연구회의 출판물 및 기타 연구들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또한 이 운동 및 이 운동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면담결과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 II. 일본의 민족주의운동

일본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운동은 메이지 초기로부터 1910-2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자유민권운동, 사회주의운동, 여성

운동으로부터 협동조합운동, 노동운동, 지역운동을 포함하여 많은 운동들이 1930년대 전 시기(戰時期)가 시작될 때까지 만개했다. 그 한 극단에서 민족주의운동도 이루어졌다.

전후에 좌파, 신좌파 운동, 신사회운동의 전개, 좌절, 융성의 과정에서 민족주의운동은 다소 쇠퇴해진 듯했으나, 자유주의사관운동에서 볼 수 있는대로 그것은 사회 곳곳에 잠복해있다가 다시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물결을 만들고 있다. 근대초기의 민족주의가 서구의 침투를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1990년대 중반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민족주의는 아시아 제국의 비난에 대항하는 것이다. 또한 그밑에는 똑같이 시민사회와 국가의 협력 메카니즘과 팽창주의의 의도가 깔려있으나, 전전에 민간에서 시작된 민족주의운동이 곧 국가주도로 바뀌어 확대되었던 데 비해, 최근 자유주의사관운동은 국가보다 지식인과 사회운동세력이 중심이 되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 1. 전전의 일본민족주의운동

대체로 서구선진국의 민족주의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것과, 후진국의 민족주의가 서구 제국주의를 방어하고 그에 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비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민족주의는 그 양면을 모두 지니는 독특한 형태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조건은 초국가주의(ultra-nationalism)라는 극단의 민족주의를 만들었고, 그것은 사회운동 차원과 국가차원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강화된 이데올로기로서 국민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민족주의로서의 순수성을 잃은 일본의 초국가주의는 주변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팽창주의, 그리고 몰락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었다 (마루야마 마사오, 1997: 199). 이러한 근대초기의 민족주의운동은 사회운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는 일본 사회운동의 중요한 특징을 형성했으며, 그것은 전시 국가체제에 완전히 흡수된 경험을 거치면서 더욱 강고해졌다. 그리고 이에 지식인들이 협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전의 운동은 전후에도 뿌리깊게 남아있는 특징을 형성했다.

#### (1)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운동

일본의 국가주의, 민족주의운동은 1870년대 메이지 초기에 서구세력이 밀려오는 것에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활동한데서 시작되었다. 1877년에 조직된 현양사(玄洋社)<sup>1)</sup>나 청일전쟁 후에 일어난 러·불·독 삼국간섭에 분개하여 1900년에 창립된 흑룡회(黑龍會) 등에서 볼 수 있는대로, 초기의 국가주의 단체들은 양이주의(攘夷主義)로부터 형성된 대륙진출론<sup>2)</sup>, 대아시아주의와 다른 한편 천황주의를 중요한 사상적 특징으로 나타냈다. 이들 단체가 당시에 일기 시작한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 向陽塾으로부터 1881년 개칭.  
2) 征韓論은 그 대표적 사상이다.

1차대전후, 대정(大正)데모크라시 시기에 여러 사회운동이 융성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가주의운동단체도 급격히 늘어났다. 이 시기 국가주의 단체의 특징은 눈을 밖으로 부터 안으로 돌려 국내문제에 운동의 표적을 맞춘 것이었다. 당시 일본사회에는 1차대전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함과 동시에 노동쟁의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운동이 고양되었다. 황도의회(皇道議會, 1918), 대일본국수회(大日本國粹會, 1919) 등, 이 시기 국가주의운동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적화(赤化)를 분쇄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좌익계의 노조, 농민조합, 수평사(水平社) 등에 무력적 습격을 단행했다. 사회주의사상과 국수주의를 결합한 국민사회주의운동이 탄생한 것도, 단지 반동주의, 국수주의로만은 민중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木下半治, 1971: 11-15).

좌익파와 우익파를 결합하여 유존사(猶存社)라는 단체를 조직하고(1919), 보다 적극적인 국내개조 프로그램을 내놓은 기타 잇끼(北一輝)의 등장은 민간으로부터 이루어진 민족주의운동의 절정이었으며, 일본팻시즘의 체계적 계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의 이른바 '일본개조법안'은 아시아민족해방의 주장 등 일본팻시즘의 주요 특징들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이것을 배경으로 많은 국가주의단체들이 생겨났으며, 특히 군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2·26사건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

## (2) 국가의 민족주의운동 흡수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했던 일본에서 국가에 의한 국민의 통합화 작업은 이미 메이지 초기의 교육칙령(敎育勅令)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군국주의화과정에서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운동은 국가에 의해 흡수되었다. 1936년의 2·26사건에서 기타 잇끼가 처형된 것은 그것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이어진 국가총동원체제에서 국가를 정점으로 관료뿐 아니라 반봉건세력, 독점자본 및 정당과 시민사회 전체가 분간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에 흡수되었다. 민간 민족주의단체들도 천황주의, 국수주의, 대아시아주의 등을 신봉하고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 국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움직임을 경계했으므로 이들 민간 단체들을 국가가 흡수한 데는 무리가 없었고, 민간에서 이룬 성장의 열매를 국가가 따와 더욱 확대시킨 것이 되었다.<sup>3)</sup>

## (3) 지식인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만들기

이미 1920년대초부터 도쿄대(東京大: 興國同志會, 七生社, 精神科學硏究會 등), 와세다

3) 사회운동에서 국가가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이용하여 이를 확대시킨 경우는 근대화 초기에 많이 나타난다. 1910-20년대의 민간의 지역운동과 정부의 지역조직 만들기는 그 좋은 예다(阿部恒久, 1982: 75-113).

대(早稻田大: 軍事研究團, 國防研究會, 潮の會), 교토대(京都大, 猶興會) 등에 교수가 지도하는 민족주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들 단체는 좌파단체들에 반대하면서 세를 넓혀갔다 (木下半治, 1971: 144-147).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지식인들의 대대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니시다 기따로(西田幾多郎)등의 교토학과 1세대와 그 제자들로 구성된 교토학과 2세대의 국체사상 만들기 및 대동아공영권의 윤리성과 역사성 구축하기, 그리고 동경대 교수 중심의 신체제운동(岩井忠熊, 1987: 151-158), 정치가를 포함한 소화연구회의 국책연구(酒井三郎, 1979) 등은 그 대표적 예다.

이 시기에 민족주의운동은 사회전반에 확장되어 누가 우익인가를 물을 필요도 없이 극소수의 이단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것에 흡수되어 있었다.

## 2. 전후의 일본민족주의운동

전후 미군정기를 거쳐 일련의 개혁조치에 따라 일본사회에서 우익은 잠시 자취를 감추었으며, 소위 역코스에서 비롯한 일본사회의 보수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우익도 선전문구로 치장된 차를 타고 거리에서 마이크로 외쳐대는 다소 희화화된 모습으로 남아 있을 뿐인 듯했다. ‘우익은 사라지고 보수파만이 있다’고 한 일본인들의 자기평가는(요미우리 석간, 1997.11.20) 그러나 전전의 민족주의가 궁극적으로 귀착했던 침략전쟁의 문제를 둘러싼 반응에서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왔으며,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보수라는 보다 완곡한 지평을 확보한 위에 우익과의 겹을 메워 광범위하게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1) 전후 우익 활동

패전시, 우익세력은 하등의 저항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자결하든지 숨어지내다가 점령군에 의해 지도급 인사들이 전범으로 체포되고 이듬해 1월초에 점령군에 의해 우익단체가 해체되었다 (최영호, 1994: 76).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천황의 존속을 염원하는 일본국민들 속에서 이름만 바꾼 전후파 우익이 탄생하고 있었다.<sup>4)</sup> 이들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공산당이 비합법화되고 1952년에 전전의 우익 거물들의 추방이 해제됨으로서 재건기를 맞게 되었다. 많은 단체들이 결성되고, 폭력을 일삼는 소위 행동우익이 속속 생겨나 테러사건도 빈발하게 되었다. 대학 내에도 신좌익에 대항하는 민족과 학생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친미반공노선의 구우익과는 다른 소위 신우익도 생겨났다. 이들은 천황중심주의를 강조하여 이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가, 기업가, 정당 등도 공격했다. 우익단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과 연결이 강한 가맹단체도 많았다. 이들은 주로 대기업에서 자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5)</sup>

4)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걸고 1960년 안보투쟁까지 활동한 日本菊旗同志會는 그 한 예다.

5) 신좌익에는 개인기부가 많은 것에 비해, 우익은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비된다 (高木正幸, 1989: 68-69).

이들 우익은 안보투쟁시 좌익과 대결했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초 교과서 문제 및 그 후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 등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990년대에 들어 전쟁책임문제에 항의하고 자유주의사관운동과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 (2) 일본 국가의 우경화

주지하는대로 미점령군은 1948년경부터는 초기의 개혁조치를 후퇴시켜 보수화되기 시작했으며, 1952년 독립한 일본정부는 본격적인 역코스를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전에 천황제에 정면으로 대결하여 비판했던 유일한 사상, 그리고 전후에 양심적 지식인 사이에는 유일한 과학으로서의 권위를 누리고 사상계에서 주도적 사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잠시 만개했던 마르크스주의 사상은(松島榮一, 1966: 51) 크게 약화되고, 노동운동과 좌파운동도 분쇄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의 천황제, 정국신사참배 및 전쟁책임문제 등에 대한 태도는 일관되게 보수화의 경향을 나타내왔다. 전후 잠시 부정되었던 천황의 권위는 1952년에는 여러 형태로 부활의 조짐을 보였다. 교육칙어부활론, 기원절문제, 신사참배 및 교과서문제, 헌법개정론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대중천황제의 붐이 연출되고 교과서 검정이 반동화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기원절이 부활되고 미키(三木) 수상이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정국신사참배를 했으며 원호법이 제정되었다.

1982년 천황제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옹호자인 나카소네(中曾)수상 취임으로 이러한 경향은 보다 적극화되었다(岩井忠熊, 1987: 147-8). 1970년말부터 1980년대초에 한국, 중국 등과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 교과서문제는<sup>6)</sup> 명치이래 일본의 전쟁과 아시아의 식민지배의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일본정부 및 국회의 보수적 견해를 드러내 주었다(아사히 조간, 1997.2.1). 이미 1970년대에 정국신사참배를 실행한 자민당 내에는 이때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의원연맹'(教科書問題を考える議員聯盟)을 발족하고 검정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高嶋伸欣, 1997: 3). 1980년대에는 또한 그간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평화헌법 개정논의가 표면화되고 확산되었다. 이른바 개헌론과 호헌론은 일본에서 보수와 혁신의 대명사인양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자민당은 물론, 공명당, 민사당도 개헌론의 편에 섰다.<sup>7)</sup>

1990년대에 들어 아시아 피해국들로부터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잠시 일본정부는 그간의 보수화 일변도의 경향을 약화시키는 듯했다. 뒤에 다시 논의할 것이지만, 1992년으로부터 1994년에 걸쳐 미야자와(宮澤), 호소카와(細川), 무라야마(村山) 수상이 아시아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의 발언을 했다. 1994년에는 전쟁책임을 본질적으로 회피하려는 매우 간교한 정책이지만, 보수적인 대부분의 일

6) 일본의 교과서는 이 때,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바꾸었던 것이다.

7)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관한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정숙(1998)을 참조할 것.

본정부와 정당의 시각에서보면 치욕적이라고 생각된 ‘국민기금’안이 발표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과서에 전쟁책임문제를 수록하는 움직임도 이루어졌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후 지속적으로 껍질이 벗겨지듯 전전의 본질을 드러내다가 잠시 주춤했던 일본의 보수적 세력은 다시 보다 거세게 일어났던 것이다. 자유주의사관운동은 이 시기에 여러 정당 등에서 일어난 보수적 움직임과 직간접으로 연계하면서 확산되어 갔다. 1996년 자민당 단독정권으로 복귀하면서 이러한 재보수화의 물결은 다시 공고화되고 있다.

### (3) 지식인의 일본주의 만들기

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후 일본의 보수화에도 지식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소위 일본인론, 일본문화론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강화해온 일본의 특수성, 우수성을 입증하는 이데올로기 작업은 특기할 만하다. 전전에 이미 탈아론(脫亞論)이나 국체론(國體論), 근대의 초극 논의 등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벗어나고 서구마저 극복하고자 했던 일본은, 패전 직후 잠시 자신감을 잃었던 때 일본의 특수성을 봉건성과 동일시했다. 그러나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일본을 서구와 동일시하기 시작했으며,<sup>8)</sup> 19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을 서구를 능가하는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sup>9)</sup> 서양의 사회과학자들도 가세한 이러한 지적 작업은 만세대계의 천황을 가진 일본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인들이 전쟁을 인식하는 방식은 아시아를 서양제국주의에서 해방시켰다거나 하는 극단적 우익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가해자로서의 인식은 절대로 주류를 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로서의 전쟁인식은 다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아시아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를 할 틈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말로 할 수 없는 피해의 실상이 담겨있는 자료들이 정부에 의해 장악되어 공개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버젓이 목도하면서도, 조선사 전문가란 학자들은 최근 ‘객관적’ 연구라는 명분으로 식민지 피해국에서 이루어진 양적인 성장을 과장하고 7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지식인들의 역사인식을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지식인들이 일본의 전쟁책임을 시인하는 듯한 일본정부의 태도와 역사기록에 분

8) 세계는 동양과 서양의 분류가 아닌, 생태학적 조건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르면 일본은 서양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메사오 타다오(梅棹忠夫)의 ‘문명의 생태사관’(1957) 등에서 볼 수 있다.

9) 서구의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일본의 탁월성을 주장하는 무라카미 야스스케(村上泰亮) 등의 ‘문명으로서의 이예(家)사회’(1979) 등에서 볼 수 있다. 일본문화론에 대해서는 한경구(1994)를 참조할 것.

개하고 나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 III. 자유주의사관 운동의 전개

자유주의사관운동은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라고 하는 동경대 교수가 1990년대 초부터의 일본의 전쟁책임문제에 관한 사회적 움직임에 반대하여 1994년 4월 교육잡지인 『교육과학·사회교육』(教育科學·社會教育)에 근현대사 수업개혁에 관한 글을 연재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글에 동감하는 사람들의 연구회가 결성되고, 매스컴이 이에 호응하고 정계와 사회운동계, 학계에 광범위하게 파장이 일어나고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확산되었다.

#### 1. 사회적 배경

자유주의사관운동의 직접적 계기는 군위안부문제 등 전쟁책임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태도와 사회운동의 일련의 변화들이다. 앞서 논의한대로 1980년대말로부터 1990년대초에 걸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국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군위안부문제는 전세계에 일본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며 불씨를 잡을 수 없이 퍼져갔다. 처음 이 문제를 사설업자의 일로 미루어 정부와 군의 개입을 완강히 부정하던 일본정부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의 발굴에 부딪쳐 1992년 마침내 군의 개입을 인정하게 되었다. 미야자와 수상은 한국에 와서 ‘피해를 당한 분들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충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며, 일본은 다시 그와 같은 과오를 거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992.1.17). 1992년 7월과 1993년 8월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군위안부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가 연행의 주체는 아니었으나 강제연행은 인정했다. 1993년 8월에는 호소카와(細川) 수상이 제2차 세계대전이 침략전쟁임을 인정했으며, 그 후 무라야마(村山) 수상은 처음으로 1931년부터 1945년에 걸친 전쟁이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임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정진성, 1995: 179-180).

이러한 정부의 태도변화에 대하여 일본의 우익들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피해국들의 운동을 돕는 일본인들에 대한 협박과 공격이 우익단체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무엇보다 그간 별다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우파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정론(正論), 제군(諸君) 등의 잡지에 연일 등장했던 이들의 기고문에서는 당시 세계사적 흐름에서 제국주의 전쟁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었다든가, 위안부제도는 양민의 고통을 막는 우수한 제도였다, 또는 법적인 책임은 그간의 몇몇 국제협약으로 완수되었다는 등의 주장이 무수히 제기되었다. 이들의 목소리가 우파여론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사회적 세력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다. 후지오카는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중립을 표방하지만, 그의 입장은 국가권위가 축소될 것을 두려워한다든가, 격렬히 민족주의를 부르짖는데서(맥코맥, 1997: 92) 이들 우파여론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이러한 중에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전쟁책임문제, 특히 군위안부 문제가 수록된 것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의 자유주의사관운동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재정, 1998: 237-262).

그러나 이 운동이 곧바로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우파운동을 추동하고 있는 데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불황이라는 배경이 있다. 1970년대 석유위기와 더불어 일본의 보수주의가 크게 고양되었던 것을 상기할 때, 최근의 보수주의는 이해할 만하다. 이 운동은 이렇게 일본의 전후 민족주의에 뿌리 박고 있으면서 또한 탈냉전 체제에 맞게 수정·개정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맥코맥, 1997: 88).

## 2. 운동의 전개

후지오카 교수는 『교육과학·사회교육』의 연재에서 ‘대동아전쟁은 자위전쟁이었다’는 발언을 필두로 남경학살 논쟁 등 일본의 전쟁책임을 부인하는 일련의 논문과 토론을 게재했다. 그는 메이지 이래 일본역사를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동경재판사관은 다시 보아야 하며, 자국의 역사에 자긍심을 갖도록하는 국익사관(國益史觀)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 1997.2.1). 그 후 그는 1995년 7월 출판사 명치도서(明治圖書)에서 새로운 잡지 『근현대사의 수업개혁』(近現代史の授業改革)을 계간으로 간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의 필자 그룹을 조직화하기 위해 1995년 2월 학자, 교사 등을 포함한 ‘자유주의사관연구회’(自由主義史觀研究會)를 발족했던 것이다. 1996년 8월 야마가따(山形)시에서 열린 자유주의사관연구회 제1회 대회에는 110여명이 참가했는데 여기에는 구(舊)군인, 군사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었고, 집회의 향연에서는 군가도 울려나왔다고 보도되었다 (아사히 조간, 1996.8.17). 교과서에서 군위안부문제를 삭제하는 국민운동을 벌이자는 다짐이 이루어졌던 이 집회의 모습에서 이 운동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운동을 강하게 뒷받침한 것으로, 산케이(産經)신문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했다. 위 자유주의사관연구회의 집필자가 분담 집필하는 장기연재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教科書が教えない歴史)를 1995년 1월부터 시작했으며, 1995년 5월에는 5개월분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 신문은 1996년 6월 28일에 새로 나온 중학교 97년용 교과서에 대한 후지오카 교수의 장문의 논평을 게재했다. 여기서 그는 “악의에 가득찬 역사관을 강요하고 자학을 정의와 혼돈한” 것이라는 격한 비판을 했다. 그는 중군위안부 기술이 7개사의 전 교과서에 등장한 점을 정치문제라고 보고, 자유주의사관연구회의 이름으로 중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의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운동에 착수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에 동조하여 사설난에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매일 전개했으며, 1996년 10월에는 『교과서가 왜곡한 역사』(教科書が歪めた歴史)라는 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高嶋伸欣, 1997: 2-5).

후지오카 등은 연구회의 작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1996년 12월에 문화, 언론,

재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모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발족을 공표했다(정식 발족은 1997년 1월 31일). 회장은 각종 잡지에 보수적인 논평을 기고하고 있는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전기통신대학 교수), 부회장은 후지오카이며,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군위안부문제에 관한 만화를 『Sapio』지에 연재하여 일본국민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친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를 비롯하여 학습원대, 명성대교수 등이 발기인이 되었으며(동경 요미우리, 1996.12.11), 이후 찬동자가 늘어 1997년 1월말 200인에 이르렀으며 계속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만드는 모임'에는 많은 기업들이 찬동자가 되어 있다. 미쓰비시(三菱)계 기업들, 스미토모(住友)계 기업, 은행들, 토시바(東芝), 후지츠(富士通)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유수의 기업들이 이들이다(俵義文, 1998.7.30). 이 모임은 자유주의사관연구회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사무국 직원도 중복된 사람이 많다. 이 모임들은 집필을 통해서 뿐 아니라, 심포지엄, 강연, 집회를 통해 소위 자학사관을 비판하고 교과서에 일본의 전쟁범죄를 기술한 것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밝은' 역사관, 일본인의 자신감을 높이는 '자유주의사관'을 확산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다른 우파 운동단체와 연구단체들도 집회를 열어 후지오카, 니시오 등 이 모임의 주요 인사들이 이에 연사로 참가하고 있기도 하다. 든든한 재정적 지원으로 여러 활동을 벌일 뿐 아니라 지식인들을 폭넓게 흡수하여 수많은 출판물을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사관 연구회는 학생으로 지지층을 넓히고, 교과서 문제로부터 전쟁책임운동 전반으로 활동을 넓히기 위하여 조직을 각양으로 확대하고 있다. 1997년 11월에 고교생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연구회의 자조직(子組織)으로서 '자유주의사관 스튜던트 서클'(自由主義史觀研究會スチューデントサークル)을 설립했으며, 1998년 2월에는 반일적·자학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프로파간다 사진·영상자료를 실증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러한 자료를 게재하는 책의 저자와 전시하는 자료관의 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프로파간다사진연구회'(プロパガンダ寫眞研究會)를 설립, 제1회 회합을 가진 후 계속 모임을 가지고 있다(俵義文, 1998.7.30).

위 모임들은 정치가와 관료를 찬동자로 오도록 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보수 정치가들과 밀접한 것이 사실이다. 뒤에 논의할 각 정당에서 이루어진 전쟁책임을 부인하는 모임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나카소네 전 수상, 문부대신 등 관료들도 관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익 운동단체와 연구단체들도 이 모임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교과서 기술삭제 요구를 법원에 소송하는 등 일본근대사를 새롭게 세우는 소위 건전한 민족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다소 극단적으로 희화화되어왔던 우익단체를 광범위한 보수집단과 연결시켜 하나의 물결을 만든 것은 이 운동의 중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4월에 운동이 시작된지 2년이 넘도록 사실상 일본의 역사학계를 비롯한 지식인 사이에서 반론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학계와 언론은 대응하지 않고 무시한

채 이를 내버려 두었고, 학생들의 역사교육 담당자인 교사들은 소외되거나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진지한 학자들이 이러한 선동적이고 학문적으로 천박하다고 생각되는 운동에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때문이었겠지만, 이렇게 2년 여를 방치한 것이 이 운동을 크게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高嶋伸欣, 1997: 2). 1997년에 와서야 비로소 학계와 언론에서는 이 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듯하다. 물론 1990년대 초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운동으로부터 연결된 것이지만, 1997년 일본의 전쟁책임을 인식하는 양심적 학자와 자유주의사관에 찬동하는 학자들간에 논쟁이 가열되고, 자유주의사관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연구물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 3. 참가자의 성격

이 운동이 정계 및 사회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위 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간단히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후지오카 자신을 살펴보면, 일본 민족주의운동의 한 중요한 단면이 발견된다. 후지오카는 1943년에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좌익집단과 관계있는 일국평화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이다. 이런 그를 전향이라고 할 만큼 크게 변화시킨 것은 걸프전이다. 그는 ‘걸프전은...헌법 9조의 평화주의 이상이 국제정치의 현실 중에서 파종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藤岡, 1996: 203)고 술회한다. 그는 인류는 전쟁을 막을 수 없으며 일국평화주의는 환상이라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사히 조간, 1996.8.17). 그는 걸프전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식에 수치감을 느끼고 일본이 국가로서 그 안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게 되었다. 또한 대동아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을 일본을 속박하는 굴레이며 일본 고유의 민족주의적 감각의 출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 (맥코맥, 1997: 85-86). 이러한 후지오카의 경력은 전전으로부터 우익 중 상당 부분이 좌파그룹에서 전향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 운동이 일본의 민족주의 구조에 깊이 뿌리 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드는 모임’의 주요 멤버인이면서 이 회와 우파를 연결시키고 있는 장본인인 고바야시도 동경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가했고 이후에도 투사였으나, 전향해서 현재에는 반민주주의자, 개헌론자의 급선봉에 서있는 사람이다 (依義文, 1998.7).

자유주의사관연구회의 회원은 1997년 현재 500여명으로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나, 기관지 실패수가 10,000여부이며 후지오카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는 40만부 이상이 팔려나갔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후지오카등의 활동이 초·중·고교에서 실제로 사회과나 일본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 연구회의 주요 회원과 책들의 집필자에도 이들 현장교사가 결집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사들의 성격을 조사한 보고(村井淳志, 1997; 마이니치, 1997.3.23)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유형이 후쿠오카와 마찬가지로 학생시기에 좌익 체험을 가졌고 비판파 단체에도 소

속된 적이 있다가 전신(轉身)한 유형으로서,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등 근래 10여년간의 사회변화를 보며 보수적인 역사관을 갖는데 이른 사람들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연구회의 운영실무면이나 논쟁에서의 전투성 면에서도 그 중핵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유형은 원래 보수적인 교원단체,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로서 일본의 전통을 중시하고 교육에서 천황에의 염(念)을 기르는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기대하여 참가한 사람들이다. 또 하나의 광범위한 층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은 지금까지 고립되어 있던 많은 교사들이 후지오카등의 초대에 응한 것이다. 소위 자유주의사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IV. 자유주의사관운동을 찬성하는 움직임

교수와 교사들이 중심이 된 이 운동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타 영역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당에 이를 지지하는 수개의 단체가 생겨나고 있으며, 지식인들 사이에 15년 전쟁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논쟁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 1. 국가/지자체/정당의 움직임

앞서 본대로 1990년대에 들어 일본정부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위와 같은 운동과 점차 강해진 우파 여론으로부터 맹공격을 받고, 고위 관리들의 수많은 망언을 내보이면서, 원점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1994년 5월 나가노(永野茂門) 법무상이 태평양전쟁을 해방전쟁이라고 규정하고 군위안부는, 당시는 공창(公娼)제도가 있었던 때이므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을 필두로, 이어 8월에는 사쿠라이(櫻井新) 환경청 장관이 전쟁으로 아시아를 독립시켰다는 망언을 했고 하시모토(橋本) 통산상, 이가라시(五十嵐) 관방장관 등이 사죄할 필요없다는 발언을 계속했다. 마침내 1994년 8월 무라야마 총리는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해결책으로 소위 '평화우호교류계획'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의 요지는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을 거부하고, 대신 아시아 피해국을 대상으로 10년간 1000억엔 상당의 사업으로 조사·연구·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12월 자민당(自民黨)에서 재차 확인하고, "중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해서 지난 대전에 일어난 배상·재산·청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로서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양국간의 평화조약 및 기타 관련된 조약 등에 따라서 국제법상, 외교상 성실히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도의적 입장에서..... 폭넓은 국민참가로서 '아시아여성평화우호기금(이하 국민기금으로 약칭)'을 모아 전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부는 이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군위안부 문제 최종해결안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하여 그 범죄성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에 의해, 배상이 아닌 위로금으로, 혼란을 수습하려는 정책으로 귀착한 것이다 (정진성, 1995: 180-182). 이후 이러한 기만적인 '국민기금'정책에 대한 피해국들로부터의 강한 반

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국민기금 측은 이 기금의 배분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기금안(案)조차도 굴욕적이라는 자유주의사관연구회의 입장과 이에 찬동하는 국회의원들의 사고는 전전의 우익 및 전후의 극단적인 우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일본의회에서 전쟁책임문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은 전쟁직후부터의 일이다. 1945년 12월 제국회의에 ‘전쟁책임에 관한 결의안’을 자유당에서 상정했으나,<sup>10)</sup> 전쟁중의 의회지도자를 다수 포함한 진보당이 이에 대항안을 제출, 결국 진보당안이 가결되었다. 1991년 진주만공격 50주년에 ‘항구평화확립에 관한 결의안’의 검토도 자민당내의 타카(タカ)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동경 요미우리 조간 1995.5.10).

정부의 국민기금안에 이른 일련의 태도에 대하여, 특히 1994년 6월 연립 3당 발족시의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미래에의 평화의지를 표명하는 결의’ 채택에 적극 대응하여, 자민당 의원 전체의 2/3인 251명의 의원이 1994년 12월 ‘중전50주년 국회의원연맹’(終戰50週年 國會議員聯盟)을 결성했는데, 그 결성취지서를 보면, “전쟁처리는 평화조약과 강화조약의 체결로 해결되었다. 우리나라가 후세에 역사적 화근을 남길 수 있는 국회결의를 행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마이니치, 1995.12.22; 동경 요미우리 조간, 1995.5.13). 이 모임의 배경에는 국회의 사죄결의를 반대한 506만명의 서명을 받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日本を守る國民會議, 후에 日本會議로 개칭)와 340만명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일본유족회’(日本遺族會) 등의 우익단체가 조직한 ‘중전50주년국민위원회’(終戰50週年國民委員會)가 있다 (마이니치 석간, 1995.8.1). 이 모임은 1996년 4월에 ‘밝은 일본국회의원연맹’으로 개칭했는데, 이 연맹 발족시 기자회견에서 회장은 “중군위안부는 상행위였다”고 말했다 (高嶋, 1997: 8). 신진당(新進黨)도 1995년 2월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국회의원 연맹’(正しい歴史を伝える國會議員聯盟)을 결성했는데, 그 결성취지서에서 “사죄하는 것은 선인(先人)의 노력과 명예를 밟는 것이고, 우리가 잔학비도한 민족이라는 레테르를 미래 영겁 짊어지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동경요미우리 조간, 1995.5.13). 결국 사회당도 연립유지를 최우선으로 한 타협을 하여, 중전50주년을 맞은 국회는 사죄와 부전(不戰)결의 없는 국회결의를 하고 말았다 (마이니치 大阪 조간, 1995.8.1). 이후 위 의원연맹들은 역사교과서 중군위안부 기술삭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만드는 모임’과 함께 움직임을 보였다. 1997년 2월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군위안부문제 등을 기술한 역사교과서를 시정하고자 중참 양의원 107명의 자민당 젊은 의원이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會)을 발족했다 (동경요미우리 조간, 1998.1.4). 이 모임은 자민당 내에서 교과서 기술 시정을 요구하여, 당은 이를 받아들여 1998년 2월 24일 ‘교과서문제 소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기도 했다 (俵義文, 1998.7).

한편 뒤에서 논의할 ‘일본회의’를 응원하기 위해 1997년 5월에 자민당, 신진당, 태양

10) 침략행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반성까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당 등의 중의원, 참의원 204명이 가맹한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도 이 운동에 적극적이다. 1997년 10월 29일 이회는 문부성을 방문하여 중군위안부기술에 대한 시정지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동경 요미우리 조간, 1997.10.30).

이렇게 중앙에서 움직이는 다른 한편에서, 지방의 곳곳에서 교과서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도도부현(都道府縣)의회와 시구정촌(市區町村)의회에서 의원제안과 주민으로부터의 청원의 형태로 중군위안부기술삭제를 요구하고 그것이 심의되어, 적지 않은 지방의회에서 기술삭제취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1998년 5월 현재, 8개의 도도부현 의회와 39개의 시구정촌 의회가 기술삭제를 채택했다<sup>11)</sup>).

## 2. 사회운동의 협력

### (1) 우익운동의 협력

전후 공격목표를 찾지 못했던 우익단체들이 전쟁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일제히 활발한 활동을 개시했으며, 새롭게 많은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日本遺族會’, ‘神社本廳’, ‘佛所護念會教團’을 비롯한 전통 우파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이 운동에 나서고 있다. 1981년에 설립되어 일본 각지에 지부를 설립한(예컨대 ‘日本を守る福岡縣民會議’, ‘日本を守る長崎縣民會議’<sup>12)</sup>)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日本を守る國民會議)의 활동은 눈에 특히 띈다. 이 단체는 1997년, ‘일본을 지키는 모임’(日本を守る會)과 조직을 통합하여, 재계와 학자를 대거 포함하여 ‘신국민운동조직’인 ‘일본회의’(日本會議)로 새롭게 발족했다 (俵義文, 1998). 이회는 히로시마(廣島), 후쿠이(福井), 구마모토(熊本), 가가와 현(香川縣), 아오모리 현(青森縣), 아이치 현(愛知縣), 오오사카(大阪)<sup>13)</sup> 등에 지부를 설립하면서, 자랑스런 나라 만들기,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주는 역사교육의 창조와 도덕교육의 회복을 목표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오부치(小淵惠三) 총리를 포함한 20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日本會議國會議員懇談會)라는 응원조직도 가지고 있다. 이밖에 ‘소화사연구소’(昭和史研究所), ‘일본역사수정협

11) 日本出版勞聯 教科書對策部の 俵義文씨가 1998년 5월 23일에 작성한 자료에는 그 지방의회의 지명까지 나와있다.

12) 이 회의 부의장 가지야마 시게루(梶山茂)는 1989년 7월 14일 전황의 책임을 언급한 나가사키(長崎)시장에 대한 협박 실시범으로 체포되었다 (高嶋, 1997: 7).

13) 예를 들면, 1981년에 설립되어 16년간 활동해온 ‘日本の傳統と文化を守る大阪府民會議’를, 1997년 전국적으로 ‘일본회의’가 발족함과 동시에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그곳에 가맹했던 각종 단체를 모체로 하여 재편·강화하여 ‘오오사카 일본회의’를 설립했다. 이 조직의 임원에는 교수, 시의회 의원, 언론인, 우익단체장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 회의 기본방침을 보면, ‘국민통합의 중심인 황실을 존중하고, 신헌법을 제정하고, 방위력을 정비하고,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를 포함하며, 당면과제로서 교과서 기술 시정을 중요한 항목으로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俵義文, 1998).

의회'(日本歴史修正協議會), '정론의 회'(正論の會), '일본의 역사에서 배우는 회'(日本の歴史に學ぶ會),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는 회'(日本の明日を考える會) 등의 연구모임과 각지의 '청년회의소'(青年會議所), '청년협의회'(青年協議會), '청년학생센터'(青年學生センター) 등의 청년모임들이 이 운동에 가담하고 있다.<sup>14)</sup>

위 다양한 단체들은 교과서 기술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의회에 청원하거나, 지방법원에 위법교과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세미나,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교과서 주식회사, 집필자들에게 공개질문서 형식의 협박장을 보내고 집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협박장에 후지오카의 기사 등이 동봉되고 있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高嶋, 1997: 6). 전쟁책임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운 우익단체들은 전국의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에도 간섭하며, 나가사키(長崎)원폭자료관에 전시된 남경대학살사건 사진에 대한 공격을 필두로 전국각지의 유사한 평화자료전시관 시설에 대하여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 (2) 기존 비판세력의 보수화

위와 같은 단체들이 활동하는 한편, 기존의 주요 비판세력들이 전쟁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보수화되고 정부와 협력하게 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의 노동조합연합은 1994년 8월에 깃발을 올린 '국민기금' 정책에 강력한 협력자가 되고, ILO등의 국제기구에서 일본정부의 입장에 따라 한국의 노조와 갈등하는 등, 일본의 전쟁책임문제 중에서도 가장 미묘한 군위안부 문제에서 국내외적으로 정부와 동일보조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일본교직원조합(日教組)은 1995년, 학교행사에서 일장기와 키미가요를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문부성과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마 필드, 1998: 9-10).

아직도 확실한 운동의 불씨가 남아있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차츰 확산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전쟁책임운동도 이러한 일본의 상황 속에서 크게 타격을 받고 사분오열되었다. 국민기금을 둘러싸고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이미 분열의 조짐을 보였으나,<sup>15)</sup> 특히 교과서기술문제의 핵심이 군위안부문제였으므로 이를 위한 우파 지식인의 공격에 이 운동은 사회적 지지기반이 적지 않게 약화되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만드는 모임'의 고바야시의 군위안부를 왜곡한 만화는 일반 일본인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이 운동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14) 日本出版勞聯 教科書對策部の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씨가 1998년 7월 30일에 작성한 자료 참조.

15) 국민기금을 둘러싼 군위안부문제해결운동의 사분오열에 관해서는 정진성(1998)을 참조할 것.

### 3. 지식인의 전후인식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 사이에 15년 전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둘러싼 소위 ‘전후론’, ‘패전후론’이 활발히 논의되게 되었다. 주지하는대로 전후 일본인들 사이에는 가해자라는 인식보다 피해자로서의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 아시아 피해국들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전후책임을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하자, 우파들의 집중공격이 이루어졌다. 아시아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일본인에 대해 우익의 협박이 가해졌으며, ‘다른 서구국가들도 같은 상황인데 일본만이 비난받는’ 이러한 최근의 전후책임문제의 논의에 대해 ‘복수(復數)의 국가들에 의한 제2의 패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sup>16)</sup> 일본정부가 전후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오히려 ‘두들겨 맞기만 하다 보면 도리어 ‘불건전한’ 민족주의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정부를 향해 외친다 (秦郁彦, 1997: 103). 과연 이러한 때에 ‘건전한’ 민족주의를 표방한, 실제로는 ‘불건전한’ 민족주의의 자유주의사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사관연구회에서는 전후책임을 논의하는 집단을 반일적 일본인, 자학적 일본인, 일본스파이단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高橋, 1997: 266).

이러한 우파와 좌파, 보수파와 비판파, 개헌파와 호헌파의 양극단을 중재하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여 폭넓은 공감을 받고 있는 논의도, 결국은 좌우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논의라고 주장한 자유주의사관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논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일본에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의 ‘패전후론’(敗戰後論, 1997)도 호헌파와 개헌파를 넘어서 제3의 입장을 제기한다고 하지만, 결국 민족주의의 복권을 지향하는 점에서 자유주의사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高橋, 1997).

전후인식을 재고하게 하는 지식인들 사이의 논의는 결국 민족주의의 복권의 필요성을 일본인들 사이에서 재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V. 자유주의 사관운동을 반대하는 움직임

앞서 언급한대로 1990년대에 들어 일본 내에서 전쟁책임운동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진지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특히 자유주의사관등의 신민족주의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항하는 집단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위험한 민족주의를 반성하고 비판하는 이들 집단은 그 동안에도 있어왔던 소수의 양심적 일본인들,<sup>17)</sup> 즉

16) 1차 패전이 미국에 의한 통제였다고 한다면, 이 2차 패전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서구국가들이 가세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江藤, 1998: 102).

17) 예컨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환경운동을 묵묵히 실행하고 있는 주부들, 재일한국인 아동을 깨끗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도록 애쓰는 교사들, 또는 전쟁피해보상재판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의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성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묵묵히 양심껏 일하고 있지만 거대한 일본정부나 안정되다 못해 무겁기만 한 일본사회 자체에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시민운동 집단과는 다르게 보인다. 그들은 백년 이상을 축적해온 민족주의로 경직되어버린 일본정부와 사회를 바꾸어 보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움직임은 사회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 정치영역으로, 그리고 지식인의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들은 일본 사회전체로 보아 극히 작은 움직임이며 서로 연결되어 명확히 분리할 수 없이 얽혀 이루어지고 있다.

### 1. 사회운동

자유주의사관운동 등의 신민족주의운동에 반대 움직임으로는 무엇보다도 1990년대초부터 강해져온 전쟁책임 운동단체에 의한 것과, 교과서기술 문제를 독립적으로 둘러싼 오랫동안의 논쟁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반대 움직임,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에 기술삭제반대 청원을 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들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전쟁책임운동을 벌여온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0년대초부터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후보상캠페인’(戰後報償實現キャンペーン), ‘전쟁책임자료센터’(戰爭責任資料センター) 등 보다 넓게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운동단체로부터 군위안부 문제에 집중하는 단체에 이르는 여러 단체들이 자유주의사관운동에 반대하여 집회를 열고 지방의회에 교과서기술삭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내기도 하고 있다 (아사히, 1996.12.19). 이밖에 전후보상문제에 큰 열심을 보였던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辯護士聯合會)도 지방의회가 기술삭제 의견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高嶋, 1997b: 10).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전쟁책임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그 밖에도 다소 규모는 적으나 수개가 있다. 진상규명과 피해자보상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전후처리의 입법을 위한 법률가·유식자의 모임’(戰後處理の立法を求める法律家・有識者の會)과 ‘위안부문제의 입법해결을 위한 모임’(慰安婦問題の立法解決を求める會)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일본의 침략 사실에 관한 기술은 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해왔다. 따라서 이것은 몇번의 과열된 논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55년 민주당이 ‘우려할 만한 교과서문제’라는 팜플렛을 내어 ‘편향’ 캠페인을 벌인 1차 교과서문제에 이어, 2차 교과서문제는 1979년부터 1980년에 걸쳐 자민당이 교과서의 편향을 공격하고 검정강화를 주장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했던 것이며, 이어 1982년에는 전쟁기술을 둘러싸고 중국, 한국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외교문제가 된 바있다. 위 교과서문제들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였으나, 최근의 자유주의사관 등의 운동은 보다 복잡해져서 강제연행의 문제, 군위안부문제에의 군 및 정부의 관여문제 등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구체적이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일본의 도의문제를 추궁하는 것이다 (아사히 조간, 1997.2.1).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교과서문제의 역사 속에 축적되어 온 운동의

힘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역사교과서기술삭제 반대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단체들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97년 발족된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教科書に眞實と自由を)은, 후지오카등의 논지는 너무나 황당무계하여 대응할 가치도 없지만, 그 영향력을 막자는 기분에서 출발했다고 전제하고,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지방의회에의 기술삭제 청원에 반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운동을 벌이고, 또는 그러한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발족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회’(歴史の事實を視つめる會)도, 자유주의사관운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의 글들을 자주 실어온 ‘주간 금요일’(週刊金曜日) 편집부와 함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7년 니이가따(新潟)에는 신교조(新教祖)계의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현연락회’(教科書問題を考える縣連絡會)가 기술삭제를 채택하지 않도록 요청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했고(마이니치, 1997.9.23), 지방 민간단체들이 연합하여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군위안부 기술삭제를 허락치 않는 단식투쟁 실행위원회’(中學校歴史教科書の從軍慰安婦記述削除を許さないハンスト実行委員會)라는 단체를 만들고 기술삭제 진정의 채택중지를 요구하는 ‘단식투쟁’(릴레·ハンガーストライキ)에 돌입했다 (마이니치 신문, 1997.10.5). 이러한 움직임들은 자유주의사관운동의 확대를 다소간 저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高嶋, 1997b: 10).

## 2. 국가/지자체/정당

이밖에 여성단체, 인권단체들 중에도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세력이 있어서,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적지 않은 건수의 기술삭제반대 청원이 접수되어, 지방의회에서 기술삭제를 채택하는 것을 다소간 막고 있다. 본인이 면접한 위 운동관계자들은 매스컴이 자유주의사관운동만을 크게 보도하고 반대운동에 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으므로 전자만이 확대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사관반대운동도 꽤 그 세력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운동에 힘입어 정당 내에도 전쟁책임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미세하게나마 일어나고 있다. 전쟁책임문제의 공방은 우선 확실한 사실의 조사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민주당, 공명당, 자민당, 사민당, 사키가케의 수명의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조사회’(調査會)설치입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의 여성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민기금」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사민당의 여성국회의원 수명은 피해자 보상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1998년 7월 조사). 이들의 움직임 역시 사회운동에서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실현될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인다.

### 3. 지식인

앞서 언급한대로 자유주의사관 움직임에 대한 지식인의 반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1994년부터 이 움직임이 이루어진데 비해, 반론은 1997년에 와서야 본격화되었으니 자유주의사관의 확대를 비판적 지식인들은 너무 과소평가했던 감이 없지 않다. 게다가 자유주의사관 움직임에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비해, 그 반대의 목소리의 대변자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앞서의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락회에서 편집한 자유주의사관에 대한 반론(1997)에 50명의 학자, 평론가 및 일선 교사가 집필했으며, 『세계』, 『주간금요일』, 『논좌』 등의 잡지에서 반대의 논지를 실은 글들이 발표되고 있고, 단행본도 다수 발행되고 있으나(俵義文, 1998.7), 역시 자유주의사관 측의 필자와 연구물의 양에 비해 적다.

## VI. 맺음말

전후 지속적으로 그러나 은밀히 강화되어왔던 민족주의의 회복 움직임은 1990년대에 들어 제기된 전쟁책임문제를 계기로 1990년대 중반 이래 본격적인 운동의 출현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의 다소 극단적인 것이라고 평가되었던 우익과 비교적 온건한 보수파의 간극을 메우며, 명시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그 물결은 기존의 비판세력까지를 휩싸 안았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경제상황과 탈냉전의 세계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된 것으로서, 그러한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대부분의 사회운동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여전한 개입, 지역사회의 뿌리깊은 보수성, 그것을 잇는 지식인의 작업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새로운 민족주의운동은 이전 일본의 민족주의의 국가주도 성격과는 다소 다르게 지식인 주도이면서 사회운동세력이 이에 크게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 그리고 이에 비판하는 사회운동의 움직임도 그 진지성과 강도에서 과거의 비판세력과 다소 다르다. 그러므로 1990년대 중반의 일본사회의 보수화는 세삼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변화의 향방이 주목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朝日新聞.

讀賣新聞.

毎日新聞.

마루야마 마사오 저. 김석근 역. 1997.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 한길사.

- 맥코맥, 가반. 1997. 「일본자유주의사관의 정체」 『창작과 비평』 98호.
- \_\_\_\_\_. 한경구 외 역. 1998. 『일본, 허울 뿐인 풍요』 창작과 비평사.
- 정재정. 1998. 『일본의 논리』 현음사.
- 정정숙. 1998. 「21세기 일본의 국력과 평화헌법: 평화헌법논쟁과 정치적 의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 정진성. 1995.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시기의 부채, 정신대: 일본정부와 여론의 대응을 중심으로」 『일본평론』 사회과학연구소. 제10호.
- 최영호. 1994. 「현대일본의 민족주의의 특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55호).
- 필드, 노다. 1998. 「머리말」. 가반 맥코맥. 『일본, 허울 뿐인 풍요』 창작과 비평사.
- 한경구. 1994. 「일본인론. 일본문화론」. 최상용 외. 『일본.일본학』 오름.
- 加藤典洋. 1997. 『敗戦後論』 東京:講談社.
- 江藤淳. 1998. 「日本第二の敗戦」. 『文藝春秋』 1998年 1月號 75號.
- 高橋哲哉. 1997. 「ネオナショナリズム批判のために」. 『現代思想』 vol. 25-10.
- 高嶋伸欣. 1997. 「近現代史教育改革運動の問題點」.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季刊.戦争責任研究』 1997年 春季號. 第15號.
- \_\_\_\_\_. 1997b. 「近現代史教育「改革」運動の問題點(2)」.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季刊.戦争責任研究』 1997年 夏季號. 第16號.
- 高木正幸. 1989. 『右翼:活動と團體』 土曜美術社.
- 藤岡信勝. 1996. 『汚辱の近現代史』 東京:徳間書店.
- 木下半治. 1971. 『日本國家主義運動史I』. 東京:福村叢書.
- 松島榮一. 1966. 「日本におけるマルキシズムの展開」. 内田義彦 外 編. 『現代思想大界:マルキシズム I』 東京:筑摩書房.
- 岩井忠熊. 1987. 『天皇制と日本文化論』. 東京:文理閣.
- 酒井三郎. 1979. 『昭和研究会』. 東京:TBSブリタニカ.
- 秦郁彦. 1997. 「慰安婦と731部隊 合體の仕掛人」. 『諸君』. 1997年 3月號.
- 村井淳志. 1997. 「自由主義史觀研究会の教師たち」 『世界』 1997年 4月號.
- 阿部恒久. 1982. 「1920年代の婦人會運動について」 女性史總合研究会 編. 『日本女性史:第 5卷, 現代』 東京大學出版會.

## NEO-NATIONALIST MOVEMENT IN JAPAN: FOCUSING ON THE MOVEMENT OF 'LIBERALIST VIEW OF HISTORY'

CHIN SUNG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social movement for so called 'sound' nationalism led by the intellectuals is being widely spread in Japan. It is the movement of 'Liberalist View of History'(LVH). The intellectuals of this movement insist on re-evaluation of Japanese modern history in order for the young people to have the pride of Japan. This movement seems to lead full bloom of neo-nationalism in Japan where nationalist movements became weak after the war. In this paper I aim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VH movement. In order to trac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is movement, I examine the pre-war nationalist movement which arose in the beginning of the modernization period and led to the war, and the post-war situation where nationalist movement became weaker. While the pre-war nationalist movement began in the civil area and then became a state-led movement, the recent neo-nationalist movement has been developed mostly by the intellectuals and civil organizations who have been closely connected with the increasingly conservative state. The pre-war nationalist movement absorbed civil groups one by one, and finally at war time, almost all groups were integrated into this movement. After the war it was also very difficult to find the movement struggling against the conservative state or nationalism since new left movement in the 1960s. However, recently, there is a formation of a critical power having real sincerity and integrity though it is small scale. We can easily predict that this neo-nationalist movement will continuously expand within a short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d cooperation with the state will intensify during a long economic depression.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his movement will incorporate all social areas and whether it will become state-led.

